



미국 : 웰스파고, 속임수 쓴 원격 노동자들 해고

웰스파고 은행이 컴퓨터 업무 활동 기록을 속였다는 혐의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¹⁾ 이들은 자산 및 투자 관리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웰스파고 측은 “웰스파고는 노동자에게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윤리적인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였다. 전국적으로 원격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늘어나면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활동을 추적하는 ‘보스웨어(Bossware)’ 소프트웨어도 발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마우스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마우스 지글러를 이용하거나 키보드를 자동으로 타이핑하게 하는 장치들을 사용하다가 발각되었다. 다만 정확히

이 노동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사용자가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가 보편화됨에 따라 감시를 통해 생산성을 측정하거나 업무 수행을 파악하는 일이 정당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²⁾ 클릭 수나 키 입력, 온라인 행동 모두를 감시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대면 근무보다 업무 통제 정도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고, 노동자를 징계, 해고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1) CBS, “Wells Fargo Fires Workers after Allegedly Catching them Simulating Keyboard Activity”, 2024.6.17.

2) USA Today, “Wells Fargo Employees Fired after Fake-work Claim Turns up Keyboard Sim, Bloomberg Reports”, 2024.6.18.

미국 : 디즈니랜드 노사, 파업 직전 극적 협상 타결

디즈니랜드 노사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¹⁾ 디즈니랜드 리조트 대변인 제시카 굿은 “디즈니랜드 리조트는 직원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대표원, 사탕 제조원, 관리인, 소매업 노동자, 놀이기구 운영자 등 14,000여 명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교

섭 위원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가 디즈니의 진정한 마술사라는 것을 디즈니에 보여줬으며,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위해 함께 뭉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라고 밝혔다.

7월 19일 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40년 만의 대규모 파업으로 치달을 가능



성이 높았지만, 협상 타결로 인해 최악의 국면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이전 양측의 대립은 매우 극심했다. 노조 연합은 주먹을 쥔 미키마우스 모양 장갑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불법 협박, 감시, 징계 위협을 받았으며 사용자 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기도 했고 계약 만료 이후에는 디즈니랜

드 손님들에게 풍선이나 노조 버튼을 나눠주며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²⁾ 또한 지난 4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임금 인상 및 공정한 출퇴근 정책, 연차에 따른 급여 인상, 공원 안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해 왔다.

- 1) CNN, “Disneyland Avoids What Would Have Been Its First Strike in 40 Years”, 2024.7.24.
- 2) LA Times, “The Mouse Gloves Are Off: Disney Workers to Vote on Strike Amid Contract Talks”, 2024.7.9.

독일 : 2024년 6월부터 전문인력이주법 최종단계 발효, “기회카드” 제도 도입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영어권 국가 중 독일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이 설문은 보스턴컨설팅그룹(BSG), 구직 포털 스텝스톤(Stepstone) 등이 188개국 노동자 15만 명의 선호 국가를 조사한 것으로 독일은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의 뒤를 이어 5위에 올라 주요 영어권 국가보다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

독일 정부와 의회는 2023년 6월에 마련된 「전문인력이주촉진법(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Fachkräfteeinwanderung)」을 통해 독일의 해외 노동자 유치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한다. 이 법은 2023년 11월, 2024년 3월, 6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효되었다. 기존에 발효된 내용은 해외 노동자가 독일 외에서 취득한 자격조건의 인정 절차 간소화와 기존 전문인력 이주 프로그램인 “EU 블

루카드” 제도 개선 등이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마지막 단계는 “기회카드(Chancenkarte)”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거주허가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하에서는 해외 구직자에게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체류가 폭넓게 인정된다. 신청자가 법에서 정한 전문인력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방법을 통해 일정 점수를 획득할 경우 구직을 위한 체류가 허용된다. 이 체류허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이고 추가로 2년이 연장될 수 있어 최장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한편 전문인력이주촉진법의 최종단계에서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및 세르비아에 대한 특별규정이 발효되었다. 이는 서부 발칸지역이 비유럽국가에서 독일로의 주요 취업이민경로라는 점을 고려

한 규정으로 이 국가들에 할당된 거주허가승인 인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내용이다.²⁾

- 1) Tagesschau, “Deutschland attraktiv für ausländische Arbeitnehmer”, 2024.4.24.
- 2)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Chancenkarte für gezielte Fachkräfteinwanderung kommt”, 2024.5.31.

독일 :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논쟁

최근 독일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지급되는 시민소득(Bürgergeld)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난민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사회보장제도 내 시민소득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 출신 난민이 난민신청절차를 거치는 동안 더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는 것과 구별된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기민·기사연합은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시민소득 대신 일반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민소득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난민들을 복지제도에 머무르게 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이다. 기독교사회당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¹⁾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야당의 주장이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하며 시민소득 지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EU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의 보호 지위를 2026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

을 언급하며, 이들을 사회보장제도에 수용하는 것이 노동청의 취업알선 등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독일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감안할 때 세금으로 실업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시민소득 지급을 중단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²⁾

한편 7월 3일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OECD는 독일에 거주하는 난민의 노동비율이 2022년 기준 70%를 기록하는 등 다른 EU 회원국 대비 높은 점과 이들의 독일어 구사능력 수준이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낮은 난민 그룹과 자녀를 동반한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들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노동시장에 잘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들 중 많은 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³⁾



- 1) Spiegel, “Der Gefährliche Streit übers Bürgergeld”, 2024.6.21.
- 2) Tagesschau, “CSU will arbeitslose Ukrainer zurückschicken”, 2024.6.23.
- 3) Tagesschau, “OECD lobt Arbeitsmarkt-Integration von Flüchtlingen”, 2024.7.4.

영국 : 2024년 총선 - 정당별 주요 노동정책 소개

2024년 7월 4일, 5년 만에 영국 총선이 이루어졌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경합이 예상되었지만 노동당의 완승이었다. 선거 결과 전체 650석 중 노동당이 412석, 보수당이 121석을 차지했다. 2019년 선거 결과 대비 보수당은 251석을 잃었고 노동당은 211석을 얻었다.¹⁾

보수당의 주요 노동정책은 공무원 수 감축, 의사, 간호사 수 증원 및 외국인 노동자 이민 제한이다. 보수당은 공무원 수 감축을 통해 세금을 더 확보하여 다른 정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에는 영국 전역 국가보건서비스(NHS) 근무자 5억 5천만 명의 해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터무니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하였다. 보수당은 5년 동안 의사 및 간호사 수를 약 12만 명 늘리겠다는 증원 정책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 정책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전문가들은 NHS 예산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외국인 노동자 이민에 대한 정책이다. 보수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²⁾

노동당의 주요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위한 부 창출이다. 노동당은 조세회피 단속, 사립학교 학비

에 대한 부가세 부과, 황재세 도입 등을 통해 80억 파운드를 조달할 계획이며 해당 세금을 다른 정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영국 공립학교 교사 약 6,500명을 추가 고용하기 위해 사립학교 수업료에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재정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 싱크탱크는 해당 정책을 통해 세금이 연간 최대 16억 파운드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계획은 다소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노동당은 NHS에 단순하게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의료 서비스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된 NHS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고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하기로 동의한 치과의사에게는 약 2만 파운드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외국인 노동자 의존 및 이주 문제에 대해서 보수당과 비슷한 결의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³⁾

2024년 7월 4일 총선 결과, 보수당이 참패했고 노동당에 정권을 넘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1) 나머지는 자유민주당(LD),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신 페인(Sinn Féin) 등 여러 소수정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의석수는 아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BBC, “UK General Election 2024 Results”, 2024.7.5.
- 2) BBC, “Conservative Manifesto: 12 Key Policies Analysed”, 2024.6.12.
- 3) The Telegraph, “Labour Party Manifesto 2024: Keir Starmer’s Election Promises”, 2024.6.19.
BBC, “Labour Manifesto 2024: 12 Key Policies Analysed”, 2024.6.13.

영국 : 재택근무를 둘러싼 논쟁 수면 위로

2023년 영국 정부는 재택근무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Flexible Work)에 대한 법안을 개정했고 개정된 법안은 2024년 4월 6일부터 적용되었다.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노동자가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기 위해 26주 연속 근무해야 했고, 12개월 동안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했다. 개정 법안에서는 연속 근무 요건이 삭제되었고 노동자들은 근무 ‘첫날’부터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12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두 번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자들은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¹⁾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영국 내 재택근무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가 흔치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사에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4월까지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86%는 재택근무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라고 응답했다.²⁾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종료됐지만 팬데믹 기간에 증가한 재택근무제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는 중이다. 많은 기업이 전면 재택근무가 아닌 하이브리드 근무(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합한 것) 혹은 사무실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했던 노동자들은 사무실 근무를 반대하고 있다. 사무실 근무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사무실 근무를 ‘갑자기’ 요구했고 충분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돌봄 가족(집에서 병간호가 필요한 가족 등)을 부양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사무실 근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전면 재택근무가 직장의 일상 업무 및 생산성에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몇몇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노동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사무실을 새롭게 단장하기도 했다.³⁾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의견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아 노사 분쟁을 조정하는 영국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s)에는 이미 재택근무를 둘러싼 소송들이 제기된 상황이다. 개정된 유연근무제 법안이 시행된 상황에서 고용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⁴⁾



- 1) Gov.UK, “Flexible Working”, 2024.4.6.
Personnel Today, “Flexible Working Changes 2024: How the New Law Works”, 2024.3.7.
- 2)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노동자의 4.7%만이 재택근무를 했다고 응답했지만 2020년 4월에는 해당 응답 수치가 약 46%까지 증가했다.
Forbes, “UK Remote and Hybrid Working Statistics 2024”, 2024.7.4.
- 3) Financial Times, “The New Normal of Office Life”, 2024.7.7.
BBC, “Labour Manifesto 2024: 12 Key Policies Analysed”, 2024.6.13.
- 4) The Guardian, “‘I’ve Got a Case’: The UK Workers Fighting Their Boss Over Return to Office”, 2024.6.19.

프랑스 : 의회 해산에도 실업보험 개혁 강행 의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면서 사실상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프랑스 정부는 실업보험 개혁을 강행할 방침이다.¹⁾ 가브리엘 아딸 프랑스 총리는 2024년 6월 13일 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파트너들과) 최종 논의가 지난 8개월 동안 이어졌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며 “그에 따라 정부에 결정권한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7월 1일까지 실업보험 개혁을 행정명령(décret)을 통해 시행할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²⁾

프랑스 정부가 강행을 예고한 실업보험 개혁안은 실업보험금의 지급 기간과 지급 조건을 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실업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기준을 적용해 최근 2년 동안 6개월 일했을 경우 18개월의 지급 기간을 보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안은 해당 조건과 지급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최근 20개월 동안 8개월 일했을 경우 15

개월 동안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 중인 요건을 규정하는 이전 행정명령이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날까지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오는 12월 1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프랑스 노동총연맹의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의회 해산 후 우리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이 불이익을 받게 될 개혁을 행정명령으로 도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³⁾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유럽연합 선거에서 극우의 약진 등에 따라 사실상 선거 참패에 가까운 결과를 얻은 뒤 의회 해산을 명령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31.37%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한 반면 여당인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세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6%에 그쳤다. 좌파와 비교해도 열세인 결과를 거둔 것이다. 좌파 선거연대인 사회당-공공 광장(Place publique)은 13.83%로 3위를 기록하며 여당 연합세력 턱밑까지 추격했으며, 9.89%로 넷째로 많은 투표를 받은 정당인 굴복하지 않

는 프랑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좌파에게도 약 10%p 차이로 밀렸다. 여기에 녹색당의 5.5%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⁴⁾ 새로운 의회는 6월 30일(1차 투표)과 7월 7일(2차 투표)로 예정된 선거 일정 이후 다시 꾸려질 예정이다.

- 1) Nouvel Obs, “Malgré la dissolution, le gouvernement maintient sa réforme de l’assurance chômage”, 2024.6.10.
- 2) Franceinfo, “Assurance-chômage : “Un décret sera pris d’ici au 1er juillet pour cette réforme”, confirme Gabriel Attal”, 2024.6.13.
- 3) Franceinfo, “Assurance-chômage : “C’est indécent d’imposer par décret une réforme qui va pénaliser plus d’un million de personnes”, estime Sophie Binet”, 2024.6.14.
- 4) Franceinfo, “Résultats des élections européennes 2024 : découvrez les scores en France, liste par liste”, 2024.6.9.

프랑스 : 정부, 실업보험 개혁 추진 중단

2024년 6월 30일 진행된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결선 투표에서 집권당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 선거연합 앙상블이 사실상 참패를 거둔 직후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전 총리는 실업보험의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¹⁾

앞서 6월 9일에 실시된 프랑스 유럽연합 의원 선거에서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31.37%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²⁾ 이는 둘째로 높은 득표율을 보였던, 집권당을 포함한 범여권 선거연합의 1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에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해산이라는 강수를 두었는데, 의회가 해산된 상황에서도 아탈 전 총리는 행정명령(décret)을 통해서라도 실업보험 개혁을 강행하

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³⁾

하지만 1차 결선 투표 후 국민전선이 230~280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어서 좌파 선거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이 둘째로 많은 125~165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앙상블은 70~100석에 그치면서 집권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⁴⁾ 조기 총선에서도 유럽연합 의회 선거와 같은 양상을 보이자 실업보험 개혁을 밀어붙일 동력이 상실되면서 결국 개혁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최근 2년 내 6개월 일했을 경우 18개월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보장했던 것을 최근 20개월 내 8개월 일했을 경우 15개월



동안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층 강화된 실업보험 개혁을 추진했다.⁵⁾ 또한 현재 기준을 마련한 이전 행정명령이 6월 30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실업보험 개혁을 중단함에 따라 현행 기준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⁶⁾

프랑스 조기 총선은 1차 결선 투표 당시의 예측과는 다르게 신인민전선이 182석을 최종 확보하며 의회 다수 세력으로 올라섰다. 집권당을 포함한 범여권 세력은 168석으로 둘째로 많았고, 국민전선을 포함한 극우세력은 143석으로 3위를 차지했다.⁷⁾

- 1) Le Monde, “Législatives 2024 : la réforme de l’assurance-chômage suspendue, après l’échec du camp Macron”, 2024.7.1.
- 2) Libération, “Résultats des européennes 2024 : le RN à 31,4%. Renaissance devance le PS d’un rien, les Écologistes juste au-dessus des 5%”, 2024.6.10.
- 3) Franceinfo, “Assurance-chômage : “Un décret sera pris d’ici au 1er juillet pour cette réforme”, confirme Gabriel Attal”, 2024.6.13.
- 4) Franceinfo, “Résultats du 1er tour des législatives 2024 : à quoi pourrait ressembler la future Assemblée nationale en nombre de sièges?”, 2024.7.1.
- 5) Nouvel Obs, “Malgré la dissolution, le gouvernement maintient sa réforme de l’assurance chômage”, 2024.6.10.
- 6) BFM TV, “Assurance-chômage : le gouvernement souhaite prolonger les règles actuelles jusqu’au 30 septembre”, 2024.7.11.
- 7) Ouest-France, “Législatives 2024 : le NFP obtient 182 députés, selon les résultats définitifs”, 2024.7.8.

스페인 : 최근 10년간 스페인 청년 무직자 비율 감소

2024년 5월 31일, 청년 무직자에 대한 EU 통계국의 통계가 발표되었다.¹⁾ 스페인의 여러 언론은 해당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 10년간 15~29세의 소위 “니니족” 비율이 10%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니니족(ninis)이란 공부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 사람(Ni estudia ni trabaja)이라

는 뜻으로 니트족에 해당하는 스페인어이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스페인 청년 무직자 비율은 12.3%로 2013년 22.5%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EU 평균인 11.2%보다는 높은 수치이다.²⁾

이에 대해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는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펼친 각종 고용정책하의 6억 유

로 이상의 지원금 지급과 노동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노동개혁을 통해 정규직 고용을 확대한 조치가 청년 구직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학교교육 조기 이탈자 비율이 감소한 것 역시 무직자 비율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스페인 주요 노총인 CCOO의 청년위원회 위원장 아드리아 주넨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할 의지가 없다는 니니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증거라는 의견을 덧붙였다.³⁾

- 1) Eurostat(2024), “Statistics on Young People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https://ec.europa.eu/eurostat/> (2024.6.17).
- 2) El Mundo, “España ha reducido su proporción de ninis 10 puntos en una década, pero sigue a la cola de la UE con un 12,3%”, 2024.5.31.
- 3) El País, “España reduce a un mínimo histórico la proporción de jóvenes que ni estudian ni trabajan”, 2024.5.31.

스페인 :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노동재해로 304명 사망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가 2024년 7월 12일에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노동재해로 인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304명이 사망했는데, 전년동기대비 16명 많고 5.6% 증가한 수치이다.¹⁾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대부분 심장마비, 뇌졸중, 교통사고, 추락사, 끼임 및 절단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건수가 많은 부문은 서비스업으로 134명이 사망했으며, 건설업이 그 뒤를 이어 60명이 사망했다. 반면 농업부문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명 감소했다. 사망자 가운데 고용노동자는 281명, 자영업자는 23명으로 고용노동자가 자영업자보다 산재사망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까지 전체 노동재해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25만 4,535건이 발생했다. 노동시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1,51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한 반면, 작업장 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9.2% 증가한 405건을 기록했다. 또한 경미한 사고는 21만 7,673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작업장 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3만 4,643건이었다.²⁾ 한편 2023년에는 노동재해로 721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05명이 줄어 12.7% 감소한 수치이다.³⁾

스페인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하루에 두 명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약 60만 건의 노동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재



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조 측은 정부에 노동현장 감독을 강화할 것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교육을 요구한 바 있다.⁴⁾ 그러나 이번에 발표

된 통계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우려할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1) 노동사회경제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는 다음을 참조. https://www.mites.gob.es/es/estadisticas/condiciones_trabajo_relac_laborales/EAT/welcome.htm#
- 2) RTVE, “Las muertes por accidente laboral suben a 304 hasta mayo, 16 más que en el mismo periodo de 2023”, 2024.7.12.
- 3) RTVE, “Los accidentes laborales provocaron 721 muertes en 2023, un 12,7% menos respecto al año anterior”, 2024.2.13.
- 4) RTVE, “Dos muertes al día y más de 600.000 accidentes en el último año: las caras de la siniestralidad laboral”, 2024.4.30.

일본 : “기능 실습” 제도 대체하는 “육성취로” 제도 도입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육성취로”로 불리는 이 제도는 기존의 “기능 실습” 제도를 대체한다. 관련 개정안이 2024년 6월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고, 법 공포 후 3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¹⁾

기존의 “기능 실습” 제도는 이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저임금 등이 만연해 비판을 받아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실습하던 노동자들이 실종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그러나 “육성취로” 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1~2년 근무 후 같은 분야 내에서 직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²⁾

“육성취로” 제도의 재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일정 수준의 기술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 “특정 기능 1호” 자격으로 전환하여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추후 “특정 기능 2호”로 전환하면, 갱신을 반복하며 영주가 가능하다. 기존의 “기능 실습” 제도는 실습 후 장기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다.³⁾

한편, 개정안에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영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영주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제기되었다.

- 1) 朝日新聞, 「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拡大へ「育成就労」創設の改正人管法成立」, 2024.6.14.
- 2) 時事通信, 「育成就労、人手確保に期待 = 外国人材、転籍容易に一地方は流出懸念」, 2024.6.17.
- 3) 朝日新聞, 「「選ばれる国」になれるのか 外国人労働者の「育成就労」制度創設」, 2024.6.14.
- 4) 日本経済新聞, 「育成就労で外国人材確保 改正法成立、技能実習に代わり」, 2024.6.14.

일본 : 후생노동성,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 추진

후생노동성은 기업에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으로 직원 301명 이상의 모든 기업에 공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¹⁾ 약 1만 8천 개 기업이 해당 의무의 적용을 받게 된다.²⁾ 현재 일본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³⁾

후생노동성은 여성 관리직 비율의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구직자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한층 더 촉진하고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축소

하고자 한다. 현재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약 70%에 불과하며, 이는 G7 국가 중 가장 큰 격차에 해당한다.⁴⁾

여성 관리직 비율의 공표 외에도 남녀 간 임금 격차 공표 의무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직원 301명 이상의 기업에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101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여성 활약 추진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노동정책 심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 후, 구체적인 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⁵⁾

- 1)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직원 300명 이상의 기업 중 57.4%, 100~299명 규모의 기업 중 28.5%가 이미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표하고 있다. 厚生労働省(2024), 「『女性活躍に関する調査』報告書」, <https://www.mhlw.go.jp/> (2024.7.29).
- 2) 日本経済新聞, 「女性の管理職比率、企業に公表義務 従業員301人以上」, 2024.6.27.
- 3) 2022년 기준 여성 관리직 비율은 미국 41.0%, 프랑스 39.9%, 영국 37.2%, 독일 28.9%, 이탈리아 37.2%, 한국 14.6%, 일본 12.9%다. 独立行政法人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4), 「データブック 国際労働比較2024」, <https://www.jil.go.jp/> (2024.7.19).
- 4) NHK, 「女性管理職比率 公表義務づけを提言 厚労省の研究会が報告書案」, 2024.7.19.
- 5) 朝日新聞, 「女性管理職の比率、公表を義務化へ 非上場企業も対象に 厚労省」, 2024.7.19.